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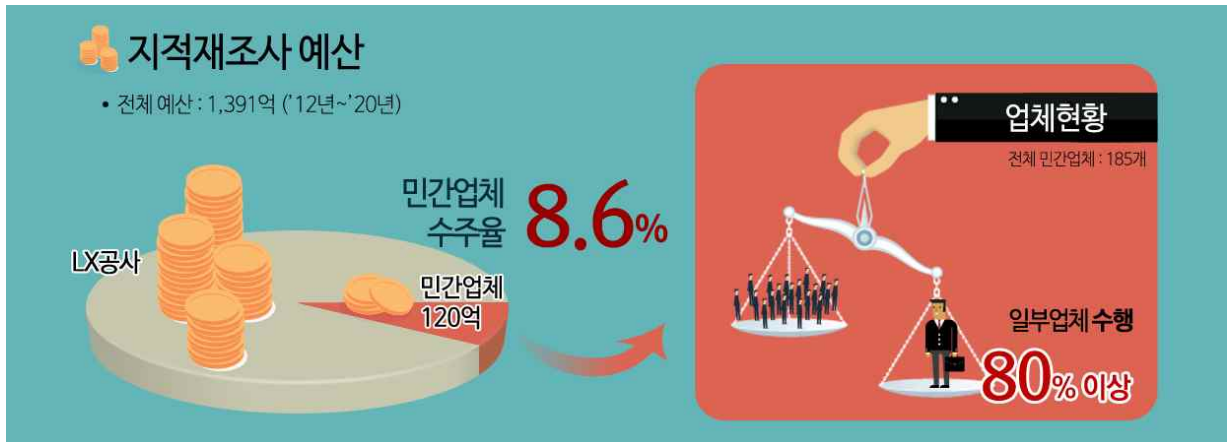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 2021. 1. 20.(수) / 총 8매(본문3, 참고5)		
담당 부서	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상철, 사무관 김일 • ☎ (044) 201-4655, 4657	
	LX공사 지적재조사처	담 당 자	• 처장 이주화, 차장 강경성 • ☎ (063) 713-1440, 1448	
보 도 일 시		2021년 1월 21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1. 21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“지적재조사사업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”

### - 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」 제도 도입으로 민간참여·상생협력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」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,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  -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.
    -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,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'LX공사')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(이하 '민간업체')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.
    -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민원이 많고,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\*하는 상황이었다.
- \* '12~'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,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(8.6%) 하는데 그쳤고, 전체 등록업체 185개 중 3개 내·외 업체가 80%(금액 기준) 이상 수주

【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현황 】



□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」 제도를 마련\*하게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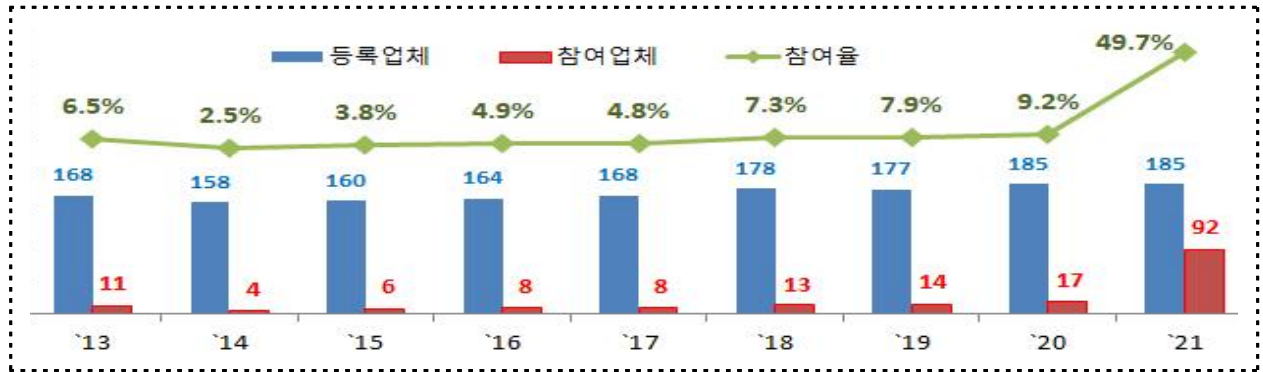
\* '20.12.22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('21.6.23. 시행)

○ 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」 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, 상생협력체계\*를 마련하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,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\*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·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,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

□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,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%인 92개 업체가 응모하여 뜨거운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.

- 이는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,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향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민간업체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

-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%인 약 210억 원(20년 41억 원, 9%)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,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.
- 또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(2년→1년)되는 한편,
-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공사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, 사업 컨설팅,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“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,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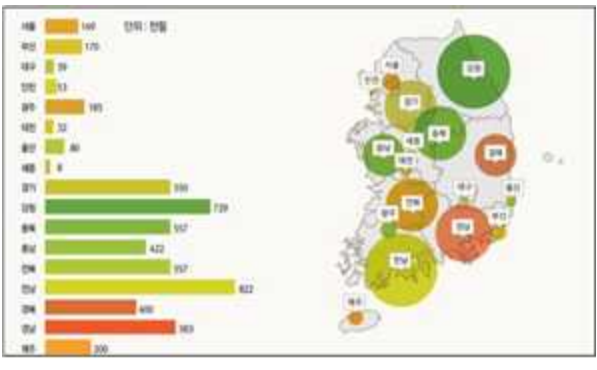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김일 사무관(☎ 044-201-46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

## 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- (추진배경)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\*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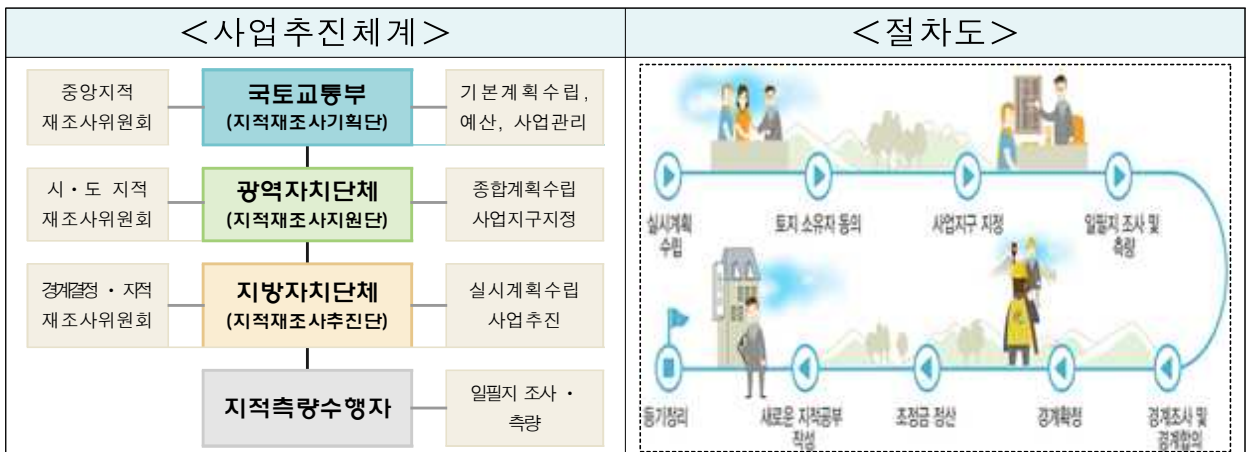
\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<종이 지적도>	<지적불부합지 현황>
	
<p>☞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(1910~1918년)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.8%(554만 필지)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</p>	

- (사업내용)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 필지 (전국 3,743만 필지의 14.8%)	'12 ~ '30 (19년간)	1조3천억원 ('12년 예타)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('11. 9. 16. 제정)

- (추진체계 및 절차)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시·도(지구 지정),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지적측량수행자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

**【 추진배경 및 목적 】**

①사업예산 증가(156→613억)에 대한 탄력 대응, ②지구별 사업공기 단축(2→1년) 및 ③민간측량수행자 참여 확대(7→30%이상)를 통한 산업 활성화 필요

□ **그간 추진경과**

- ('19.09.16) 책임수행기관 운영계획(안) 마련 T/F 구성(국토부, LX, 협회)
- ('19.12.03) 책임수행기관 정책설명회 개최(지자체, 학계, LX, 민간 등)
- ('20.02.17)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 추진(10개 지자체)
- ('20.12.22)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

□ **책임수행기관제도 주요 내용**

**① 상생·협력체계 마련**

- (지적재조사측량 분담)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분담업무 수행
    -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만 민간업체 (30~40%)에서 수행,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(60~70%) 전담 수행
- \*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공정 분담비율은 조사·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

자료조사	계획준비	일필지측량		면적측정 및 계산	경계조정 (확정)측량	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	토지현황 조사서작성
		지구계	필계점				
책임수행기관			민간		책임수행기관		

## ② 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

- (전담팀 운영)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, 지적재조사 경계협의·조정,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
- (사업지원체계 마련)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Help-Desk,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
- (기술 및 교육지원) 민간업체 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

## ③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

- (효율적 인력 운영)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~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·수행
  - \* 기존에는 지적측량수행자 선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매년 5월 이후 착수 가능
- (전문성 확보) 지적재조사 공정 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상호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기단축 기대
  - \* 책임수행기관이 경계협의·조정을 전담함으로써 대민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
- (사업관리 내실화)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 등 책임수행

## □ 기대 효과

- (사업기간 단축) 일필지측량(민간)과 경계협의·조정(책임기관) 절차를 분리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
- (민간산업 활성화) 과도한 경쟁관계를 해소하고, 일부 민간업체의 독과점을 예방하여 민간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
- (일자리 창출) 책임수행기관 전담팀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민간업체 참여 확대에 따른 신규 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

**참고 3**

**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민간업체 참여 현황**

시·도	사업대상 시·군·구	등 록 업체수	참여업체		비 고
			업체수	참여율(%)	
계	216	185	92	49.7	
서울	-	16	1	6.3	
부산	16	12	6	50.0	
대구	7	1	-	-	
인천	10	9	4	44.4	
광주	5	3	2	66.7	
대전	4	5	2	40.0	
울산	5	5	1	20.0	
세종	1	1	1	100.0	
경기	37	36	14	38.9	
강원	18	6	3	50.0	
충북	14	15	8	53.3	
충남	16	12	10	83.3	
전북	14	9	6	66.7	
전남	22	15	10	66.7	
경북	24	21	15	71.4	
경남	21	17	7	41.2	
제주	2	2	2	100.0	



**[Q1]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?**

- ☞ 계획된 기간(2030년)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,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행 사업을 운영하여 안정적 사업정착을 도모하고자 함

**[Q2]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좋아지는 점은?**

- ☞ 토지경계 설정 및 조정 등 국민재산과 밀접한 업무는 책임수행기관이 추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, 토지현황 조사·측량의 조기 착수를 통해 사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

**[Q3] 책임수행기관 선정과 업무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?**

- ☞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,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이 조사·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며,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여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함

**[Q4]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의 업무분담을 구분하는 방식은?**

- ☞ 책임수행기관은 지구계측량, 경계조정·협의 등 토지경계 설정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,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, 면적측정·계산을 담당하는 등 지적재조사 업무 프로세스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담함

**[Q5]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?**

- ☞ 지적재조사 협력수행자 선정 공고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업체를 모집하고, 시스템을 통한 정량·정성평가를 거쳐 각 지자체별 민간업체를 협력수행자로 선정함